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2021년 4분기(10·11·12월) 좋은 보도·프로그램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이 선정한 2021년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부산민언련은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언론의 취재가 좋은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때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역민과 좋은 보도의 가치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후보작 14편은 지역밀착형 보도의 진가를 보여줬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구독자 수나 발행 부수를 들어 지역언론의 영향력이 쇠퇴했다고 평가하지만, 지역의 행정·예산 감시, 지역민의 안전 점검, 지역사회가 기억해야 할 가치를 돌아본 보도들은 지역언론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되새기는데 충분했습니다.

후보작 14편 가운데 국제신문 <원전핵폐기물·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연속 기사>(이석주 기자), 부산일보 기획보도 <학교가 사라진다>(황석하·변은샘·곽진석·손혜림 기자), 부산MBC 기획보도 <동·서균형발전으로 서부산 좋아졌나?>(현지호 기자)를 2021년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했습니다.

국제신문의 <원전핵폐기물·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연속 기사>는 지역의 주요 현안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여러 분야의 기사로 보여줌으로써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지역의 문제 제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기여했습니다.

부산일보 기획보도 <학교가 사라진다>는 통폐합·폐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작은 학교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교육현장의 모습을 빈익빈 부익부 측면에서 조명해, 소외지역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구체적 사례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부산MBC 기획보도 <부산 동·서 균형발전의 허울>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철마다 반복해 등장하는 공약인 동·서 균형발전사업의 10년을 돌아봐 시의적절 했고, 서부산 개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예산 투입 실효성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높였습니다.

이번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 보고서에서는 3편의 선정작에 대한 평가와 함께 후보작 11편에 대한 약평도 첨부합니다.

2021 4분기 좋은보도·프로그램 추천작 목록

번호	매체	보도	기자
1	KBS부산	8시간 꼬박 밤샘...최저임금도 못 받아	최재훈·김아르내
2	KBS부산	한평생 위안부 피해자 인권 운동... 추모 받길 이어져	정민규
3	부산MBC	“교통공사 사장 추천해달라” 2천만 원 용역	윤파란
4	부산MBC	새마을장학금 무상교육 되니 대학생에 '올인'	윤파란·김유나
5	부산MBC	[기획보도] 동·서균형발전으로 서부산 좋아졌나?	현지호
6	부산MBC	[기획보도] 보행사 사람이 치였다	송광모
7	부산MBC	[긴급취재] 특별법 발의 부산 방폐장 되나	윤파란
8	KNN	연안보존, 740억 쓰고도 악화	주우진
9	KNN	산업단지에 비행센터 건립, 주민은 반발	황보 람
10	국제신문	'부산형 복지'서 밀려난 차상위층	민건태
11	국제신문	원전핵폐기물·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연속 기사	이석주
12	부산일보	[기획보도] 학교가 사라진다	황석하·변은샘· 곽진석·손혜림
13	부산일보	오시리아 '소더비 부산'에 '검은돈' 유입 의혹	민지형
14	부산일보	인건비 아끼려다... 푸드뱅크 기부식품 매년 10억 원 썼다	안준영



[관련 기사]

<원전 지역이 핵폐기물도 떠안아라? 황당한 고준위특별법>(11/25, 3면, 이석주)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1124.99003007710>

[사설] 부산 울산이 사실상 '영구 핵폐기장' 될 순 없다(11/26, 사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11126.22019008236>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은 폭탄 돌리기식 전략"(11/30, 온라인, 이석주)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1130.99099009429>

[영상 뭐라노]갈 곳 없는 폐연료봉...부산·울산 '영구 핵폐기장' 전략할라(12/4, 온라인, 오찬영PD)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11203.99099000929>

<고준위 특별법 부울 반발에도 밀어붙이는 '서울'>(12/8, 1면, 이석주)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1208.33001002031>

<부.울 핵폐기장화 굳히기 나선 정부>(12/13, 1면, 이석주)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1213.33001003554>

<핵폐기물시설 영구난제 우려..고리 1호기 해체도 지연>(12/13, 2면, 이석주)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1213.33002003546>

<“지역여론 외면한 핵폐기물 처분 특별법 결코 안돼”>(12/20, 21면, 이석주)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2100&key=20211220.22021005631>

<'3無 공청회'로 부울 핵폐기장 썩기>(12/20, 1면, 이석주)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1220.33001005300>

<부울 당사자 뺀 채 기습토론회..패널도 "이런 행사 왜 하나">(12/20, 4면, 이석주)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1220.22004005511>

[사설] 허울 뿐인 핵폐기장 공청회, 이게 정부가 할 일인가(12/21, 사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11221.22023005930>

<"부울 핵폐기장화는 공론화 실패의 산물...원점 재검토를">(12/21, 2면, 이석주)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1221.22002005889>

<'부울 핵폐기장' 속전속결로 내주 확정...정치권 저지 움직임>(12/23, 2면, 이석주)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1222.99099006525>

<"핵폐기물 책임 전국 분담 마땅...광역별 임시저장시설 짓자">(12/24, 4면, 김진룡)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11224.22004007052>

<부산시·시의회 "정부 부울 핵폐기장 계획안 반대">(12/27, 5면, 김진룡)

<'부울 패싱' 핵폐기장안 20일 만에 통과>(12/28, 1면, 이석주)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1228.33001008212>

<"지역여론 묵살한朴정부 행태 답습...애초 의지 없었다">(12/28, 3면, 이석주)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11228.22003008209>

[사설] 사용후핵연료 원전 내 보관 강행은 비민주적 폭거(12/28, 사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11228.22023008055>

<핵폐기장 반발 거센데...사태 심각성 모르는 PK 여당 의원들>(12/29, 5면, 정유선)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211229.22005008600>

[사설] 핵폐기장 반발 여론 수렴 외면하는 PK 여당 의원들(12/30, 사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11230.22019008827>

■ 부산일보\_기획보도 <학교가 사라진다>

‘지방소멸’, ‘인구감소’ 흐름 속 교육현장 빈익빈 부익부  
부산일보의 새로운 시각,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각



<부산일보>는 불합리한 통·폐합, 폐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산의 작은학교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사라진 '작은학교' 부산 22곳...특별·광역시 중 '최다'>(10/18, 1면)를 시작으로 <비수도권 차별과 겹치는 '학교 통폐합'>(11/24, 2면)으로 막을 내린 총 22건의 기사에는 학교가 사라져 장거리 등교에 나선 학생들, 가치보다는 경제적 논리가 지배한 교육 현장, 이에 대한 지역민의 여론, 다른 지역·국가의 사례가 담겼습니다.

이를 통해 사라지고 있는 작은 학교 문제는 비단 그 지역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젊은층 유출→상권 축소→빈집 증가 악순환의 고리이기도 한 것을 알게됐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조용히 발생하고 있던 작은 학교 통·폐합, 폐교에 지역언론이 주목하자 이는 우리 지역이 풀어야 할 문제가 되었고, 작은 학교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고 다양한 여론을 전달했을 뿐 아니라 정책적 변화까지 이끌어낸 부산일보 기획 '학교가 사라진다'를 2021년 4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 [관련 기사]

<사라진 ‘작은학교’ 부산 22곳… 특별·광역시 중 ‘최다’>(10/18, 1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01719180262067>

<학기 중 물품 처분… ‘뜯겨 나가는’ 학교 보며 아이들 상처>(10/18, 3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01719210415403>

<교육청이 주도하는 ‘답정너’식 통폐합>(10/18, 3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01719203539266>

<“소규모 학교 폐교=지역 황폐화” 교사·학부모·주민 ‘한목소리’>(10/21, 1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02019223708702>

<경적에 ‘화들짝’ 비탈길과 ‘씨름’… “학교 가는 길이 트라우마”>(10/21, 8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02019100380563>

<학교 멀어진 아이 33.8% “잠 더 잤으면”>(10/21, 8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02019063926528>

<학교 사라진 동네, 인구도 급속 유출… 학교는 ‘인구 댐’이었다>(10/25, 8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02418280604636>

<교사·학부모 59%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한다” 응답>(10/25, 8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02418281221408>

<“작은학교는 교사·학생·학부모가 삼위일체를 이룰 수 있어”>(10/29, 8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02818272549762>

<‘예산 0.5% 절감’ 쥐꼬리 경제 효과 위해 포기한 것은…>(10/29, 8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02818271055763>

<코로나 시대, 작은 덩치가 큰 힘 발휘… 4단계에도 교육 공백 없다>(11/1, 8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03118541317886>

<‘지역사회 학교’ 학생 수 적은 곳 통폐합 막을 대안으로>(11/1, 8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03118541052902>

〈“교육은 국가정책… 학교 크기 상관없이 강점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해야”〉(11/4, 8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10319022548121>

〈남해 상주초등 오감 교육, 학교도 살리고 마을도 살렸다〉(11/4, 8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10319002636165>

〈모든 교사가 학생들 담임… 바이올린 수업 등 신나는 학교〉(11/8, 6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10719205231035>

〈코로나에도 맞춤형 학습… ‘사근초등’ 입소문 타고 입학 문의 빗발〉(11/8, 6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10719205385700>

〈통폐합 밀어붙이던 온타리오주, 백기 들고 선거서도 패배〉(11/11, 8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11019284307950>

〈“학교 통폐합은 도시의 심장에 구멍 뚫는 것”〉(11/11, 8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11019284487310>

〈볼티모어의 복식학급, 인구 감소시대 ‘통폐합 대안’ 각광〉(11/15, 8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11109563407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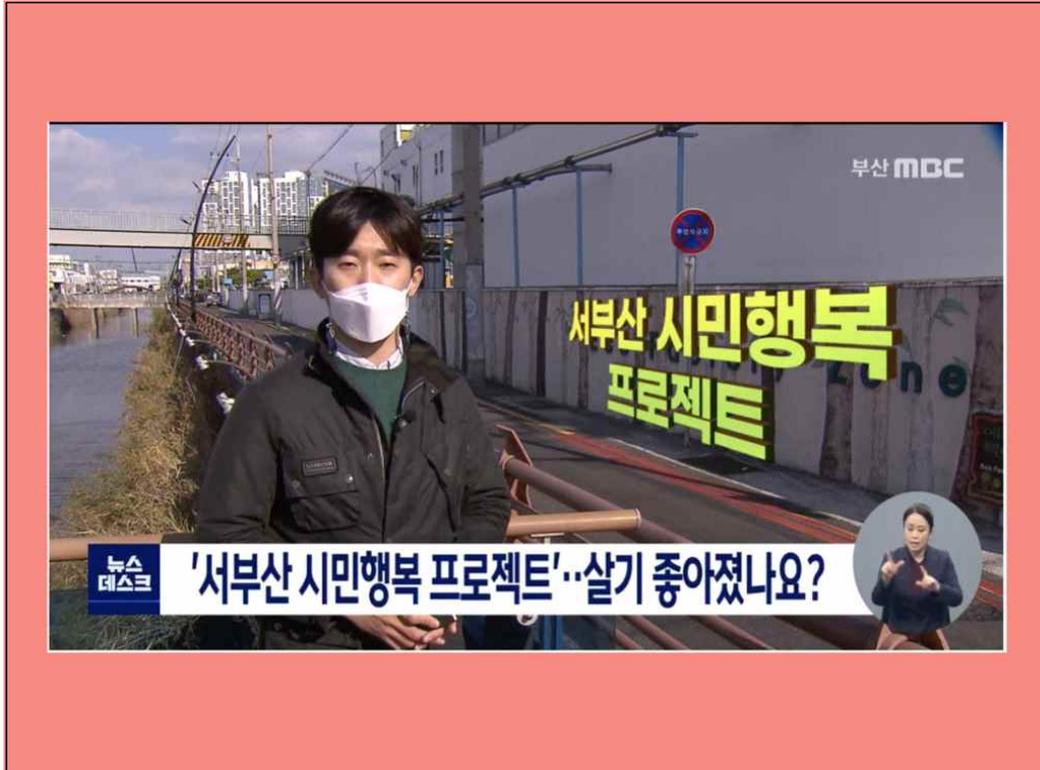
〈“학교 통폐합이 교육 개선과 재정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11/15, 8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11401065559512>

〈고사 위기 작은학교, ‘강소학교’로 키운다〉(11/18, 1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11614215116392>

〈[기자일기] 비수도권 차별과 겹치는 ‘학교 통폐합’〉(11/24, 2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12319111124579>

■ 부산MBC\_기획보도 <부산 동·서균형발전의 허울>

반복되는 공약 구호인 동·서균형발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공약 점검한 부산MBC



<부산MBC>는 11월 29일부터 나흘 간 기획으로 <부산 동·서균형발전의 허울>을 보도했습니다. 부산의 고질적 문제로 선거철마다 반복해 등장하는 동·서균형발전 공약을 점검한 보도는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더욱 값졌습니다.

시작은 10년 전 부산시가 추진했던 ‘서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도시 재생, 휴게 공간 조성 등을 위해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찾는 이가 없고, 주변 환경 또한 열악하다 지적했습니다. 동·서균형발전과 관련해 동·서 격차에 따른 정책의 당위성, 필요성을 기반으로 시 차원의 정책 추진에 주목하는 보도 일색이었던 가운데 공약 이행, 정책 추진에 따른 현재 모습에 주목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문제제기와 함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초대형 장기프로젝트에 앞서 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시민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나의 구호로 자리 잡은 동·서균형 발전의 10년을 돌아봐 시의적절 했을 뿐 아니라 문제제기와 함께 대책까지도 고민하게 한 부산MBC 기획보도 <부산 동·서균형발전의 허울>을 2021년 4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 [관련 기사]

[연속보도] 동·서균형발전으로 서부산 좋아졌나?

<‘서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살기 좋아졌나요?>(11/29, 현지호)

<https://www.youtube.com/watch?v=Xp-UNemAKG0>

<시장 교체되면 또 다른 사업..“10년 표류했다”>(11/30, 현지호)

[https://www.youtube.com/watch?v=95vqce1i\\_Sc](https://www.youtube.com/watch?v=95vqce1i_Sc)

<‘영혼 없는 서부산 개발’, 여전히 ‘현재진행형’>(12/1, 현지호)

<https://www.youtube.com/watch?v=9jDAa9lkk90>

<‘영혼’없는 발전전략..”완성도부터 높여라”>(12/2, 현지호)

<https://www.youtube.com/watch?v=hO1h5CktBf0>

## ■ 2021년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후보작 약평

KBS부산 ‘8시간 꼬박 밤샘...최저임금도 못 받아 외 1건’은 10월 18일 부산항운노조의 불투명한 기금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보도 이후 이어졌습니다. 부산항운노조의 비위고 발에 머무르지 않고, 법적노동관계법상 사각지대에 있는 항운노조 노조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조명했습니다.

[대표 기사]

<https://www.youtube.com/watch?v=eQEgVwj1UeE>

KBS부산 ‘한평생 위안부 피해자 인권 운동...추모 발길 이어져 외 2건’은 지난해 10월 29일 별세한 부산민족과여성 역사관 김문숙 이사장님을 기억하는 것의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공동체가 지켜야 할 가치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별세 당일 소식을 전한 건 KBS 부산이 유일했고, 11월 9일 KBS부산 뉴스7 ‘대담한K’를 통해 고인이 남긴 가치의 계승에도 주목했습니다.

[대표 기사]

<https://www.youtube.com/watch?v=InMAJRV4ZR0&t=91s>

부산MBC “교통공사 사장 추천해달라” 2천만 원 용역 외 2건’은 부산시 공공기관장 임명 발표 전 날, 공공기관장 추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선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부산시의 행정을 감시했을 뿐 아니라, 부산시의회에는 철저하게 인사검증해야 함을 압박했고 시민사회와 노조가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에 주목하게 했습니다.

[대표 기사]

<https://www.youtube.com/watch?v=vOfE9sIbdhs>

부산MBC ‘새마을장학금 무상교육 되니 대학생에 ‘올인’ 외 1건’은 2019년 부산MBC가 집중편성해 보도했던 새마을 장학금 문제에 대한 후속보도였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대상, 지급액, 건물 보수비 등 점검을 통해 해당 사안을 지역사회에 환기했습니다.

[대표 기사]

<https://www.youtube.com/watch?v=d98Fq16Qeaw&t=208s>

부산MBC ‘기획보도 보행자 사람이 치였다’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도로 위 약자인 보행자의 안전을 집중점검한 보도로 보행자 중에서도 노인 보행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례 제정을 이끌어 냈고, 부산시 보행자우선도로 사업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대표 기사]

<https://www.youtube.com/watch?v=y-F5J35Ds6A>

부산MBC ‘긴급취재 특별법 발의 부산 방폐장 되나’는 고준위 특별법 관련 사안을 쉽게 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선 정국에서 불거진 탈핵·찬핵 논쟁에 앞서 핵폐기물 처분에 대해 논의하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언론 중 유일하게 기획보도로 전달해, 기사 형식으로도 ‘고준위 폐기물’ 문제의 중요성에 무게를 더했고 비판 지점들도 날카로웠습니다. 부산 지역 뿐 아니라 타 지역MBC에서도 해당 리포팅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대표 기사]

[https://www.youtube.com/watch?v=XLWm\\_bcZ8Xs](https://www.youtube.com/watch?v=XLWm_bcZ8Xs)

KNN ‘연안보존, 740억 쓰고도 악화 외 1건’은 연안정비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이 매년 수백억에 달함에도 연안정비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첫 보도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추가 취재를 통해 연안정비 사업 시행 전 실시하는 정밀조사가 부산에서는 단 한 곳에서도 진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대표 기사]

<https://www.youtube.com/watch?v=KHCVgiWxD1g>

KNN ‘산업단지에 비행센터 건립, 주민은 반발 외 2건’은 진주시가 가산일반산업단지에 헬기 비행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주목했습니다. 실제 인근 지역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주민, 학교 등 취재를 통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주목했습니다.

[대표 기사]

<https://www.youtube.com/watch?v=qUaN1nKudr8>

국제신문 “부산형 복지’서 밀려난 차상위층 외 2건’은 부산시가 재난지원금 강화를 이유로 차상위계층을 위한 사회 복지 제도 개선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부산시의 ‘부산형 사회복지’ 사업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해, 부산시 복지 정책 감시에 충실한 보도입니다.

[대표 기사]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11111.33001003232>

부산일보 ‘오시리아 ‘소더비 부산’에 ‘검은돈’ 유입 의혹’은 부산시가 MOU를 체결한 사업에 다단계 사기 피해 자금 중 일부가 유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입니다. 타매체에선 보도하지 않은 단독기사로, 의혹 제기로 단발에 그치긴 했으나 부산시엔 해당 사업 진행에 경각심을 가지게 했고, 사업 투자를 염두에 둔 시민에겐 신중을 기하게 했습니다.

[대표 기사]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22119302499113>

부산일보 ‘인건비 아끼려다...푸드뱅크 기부식품 매년 10억 원 썼다’는 부산시 구군청이

기부 상한선을 정해 놔 매년 최소 10억 원 규모의 기부식품이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실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부산 구군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에 그간 소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푸드뱅크를 대신해 언론이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다했습니다. 사설을 통해 부산 지자체의 변화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대표 기사]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22619203445630>